

Appendix: Executive Summaries in Korean

(국문요약)

Appendix: Executive Summaries in Korean(국문요약)

Sub-regionalism (FTAs/RTAs) in the APEC Region and the Road to the Bogor Goals APEC 지역의 소지역주의와 보고르 목표

박성훈 고려대학교 교수

1990년대 초반 이후 다자주의체제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 추세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최근의 세계경제는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병존’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새 물결의 배경에는 1990년대 말부터 양자간 FTA 형태를 중심으로 지역주의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책 변화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와 동시에 APEC의 중요한 구성원들인데, 최근 이에 따라 APEC내에서도 소지역주의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겠다. APEC 내에서 진행되는 소지역주의는 특히 APEC 회원국들이 설정한 2010/2020년까지 역내 무역투자자유화를 달성한다는 보고르 목표의 달성 여부와 관련하여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WTO, OECD 등에서도 1990년대 중반 많이 논의된 바와 같이 지역주의의 창궐은 다자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이를 APEC 차원의 문제로 좁혀서 볼 경우, 어떻게 하면 APEC내에서 진행되는 소지역주의가 보고르 목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하는 정책과제를 발견할 수 있다.

APEC은 1990년대 말부터 점증하는 소지역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개발하였다. 1990년대에는 개방적 소지역주의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2000년대 초반 들어서는 (소)지역주의의 흐름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를 인식하고, 이를 보고르 목표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는 APEC 차원

의 정책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APEC의 두 가지 활동, 즉 ‘지역주의의 최적관행 활용’ 및 ‘고품질의 지역주의 활성화’를 소개하고, 향후 APEC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를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APEC의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APEC의 소지역주의가 보고르 목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APEC 회원국들이 소지역주의를 위한 무역협정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무역전환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역협정의 관할지역을 확대하고(많은 회원국이 참여하는 FTA 선호), 이미 체결된 협정에도 많은 APEC 회원국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미 존재하거나 새로이 체결될 여러 FTA 협정들(특히 원산지규정에서 강하게 나타남)의 자유화 방식, 범위, 심도상의 차이에 의해 빚어지는 소위 ‘스파게티 접시 효과’를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특히, 많은 FTA 협정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이슈들에 대해 ‘모범적 조치’를 개발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한편,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하는 원산지규정을 통합하거나, 이를 위해 강력한 권한을 가진 모범적 조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지역주의가 진행되더라도 이들이 보고르 목표의 달성을 실질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역원활화’를 종래보다 더욱 강하게 추진하는 한편, 새로이 체결되는 FTA 협정들의 최종 이행 연도를 보고르 목표 연도와 일치하도록 하고, 이를 다른 APEC 회원국들에게 개방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물론 많은 장애요인들을 극복해야 하지만, FTAAP에 대해 회원국들이 일단 합의한다면, 이는 매우 효과적인 보고르 목표 달성방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작동하고 있는 많은 역내 FTA들의 상호교차를 더욱 확대하여 장기적으로는 실질적인 아·태지역의 FTA를 완성하는 효과를 노리거나, 아니면 모든 회원국들의 합의하에 FTAAP를 위한 협상을 새로 시작하는 방법 등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본 연구는 판단하고 있다.

Dealing with Domestic Conflicts in FTA Negotiations:

Lessons from the Korea-Chile FTA and NAFTA

FTA 추진상의 국내적 갈등 극복을 위한 과제:

한·칠레 FTA와 NAFTA 사례를 중심으로

안세영 서강대학교 교수

전통적으로 지역주의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던 아·태 지역의 네 나라(미국, 일본, 중국, 한국)가 최근에는 활발히 자유무역협정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과 2007년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국내이해집단의 정치적 반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앞으로 아·태지역 경제협력을 위한 FTA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이 지역 국가들간에 존재하는 경제력 격차, 국내정치제도의 차이, 문화적·역사적 장벽 등이 아니라 FTA로 인한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입을 패자집단의 정치적 반발로 인한 대내적 갈등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이 논문은 아·태지역 국가들이 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대내적 갈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국내적 갈등에 대한 이론적 모델로 퍼트남의 두 단계 게임이론을 소개하고, 이 분석 틀 속에서 한·칠레 FTA협상에 대한 사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과 칠레의 FTA협상은 퍼트남이 말하는 국제협상의 국내정치적 반발을 결정하는 네 가지 요소, 즉 협상사안의 동질적 또는 이질적 성격, 국내이해집단의 정치적 반발의 형태, FTA협상의 정치이슈화 여부, 그리고 정치적 지도력 등 모두에서 순조로운 국내협상을 어렵게 하였다. 즉 칠레와의 시장개방으로 이익을 보는 승자와 패자가 확연히 나뉘어졌으며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패자집단은 정치적으로 강하게 반발한 데 반해 전자, 자동차부품 산업으로 이루어진 승자집단은 무임승차를 하려 하고, 칠레와의 협상이슈는 'FTA=농민희생+재벌의 이익'이라고 지나치게 정치이슈화 되었으며, 대통령은 거의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아 국회비준이 세 번이나 무산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여당인 민주당과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중산층, 노

조의 강력한 정치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한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하여 무난히 의회에서 NAFTA 비준을 받았다.

결론으로 이 연구는 아·태 지역의 경제통합, 특히 미국, 일본, 중국과 한국 등 4대 주요국이 앞으로 당면하게 될 국내갈등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네 가지 정책 제안을 한다. 정치지도자의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 미국, 중국, 일본의 국제적 리더십, 중간 수준의 FTA, 그리고 패자집단의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국내지원제도이다.

특히 이 연구는 FTA로 인한 시장개방으로 심각한 대내적 갈등을 초래할 미국, 일본, 중국과 한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은 너무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은 제외하는 중간 수준의 FTA를 차선의 선택으로 권고한다. 만약 2006년과 2007년에 진행된 미국과 한국간의 협상이 미흡하나마 중간 수준의 FTA라도 체결되면 이는 주요국간에 '경쟁적 자유화'를 불러와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을 가속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즉 한·미 FTA는 먼저 일본과 중국을 자극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성사되게 하고 궁극적으로 미·일 FTA까지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는 2006년 11월 베트남 APEC 정상회담에서 제안된 'APEC-wide 자유무역지대'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Coping with Increased Capital Mobility: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자본자유화 확대에 따른 대응과 시사점: 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운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박해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자본의 이동성이 증가한 데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추진되었던 외환자유화 및 자본자유화 등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조치는 주식시장, 채권시장 및 외환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였는데 이는 자본유입에 따른 국내충격을 완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조치들로 인해 외국자본의 유입규모는 지속적으로 증대하였으며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최고수준에 이르렀다.

외국인 자본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인해 위험요인들도 증대되었는데 먼저 해외변수들이 국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증가했다는 것을 실증적인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외국인 자본이 일부 우량대기업에만 집중되어 투자되는 편중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해외자본의 지속적 유입으로 원화절상 압력이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거시경제적인 부담이 증대되었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투기적 자본의 공격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이는 최근 들어 헤지펀드들이 신흥시장으로의 투자를 늘리고 특히 아시아 지역으로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 우선 감독기구간 국제적인 협력이 긴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투기적 자본에 대한 정보공유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 헤지펀드에 대한 개별국가 또는 아시아 차원의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자본이동성이 증대되고 이를 통제할 만한 실질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데 우선 투기적인 거래를 식별하기 위해 거래내역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또한 모니터링에 의한 상시적인 감시체제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시장에 알릴 필

요가 있으며 투기적인 자본과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리스크 관리 등과 같은 간접적인 규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기적인 공격과 외부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시장의 효율성 증대, 유동성의 제고 및 거시경제적인 안정성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험은 자본의 이동성 증대에 따른 외국자본의 지속적인 유입이 자본유출입의 급격한 변화 등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노력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은 여타 아시아 국가들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Transpacific Imbalance and Challenges to East Asian Economies: Risks and Agenda for Cooperation

범태평양 경상수지 불균형과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도전: 리스크와 협력과제

안형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태평양지역의 경상수지 불균형이 세계경제 안정에 위협이 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글로벌 불균형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지속적인 태평양지역의 경상수지 불균형은 동아시아지역 경제 안정에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은 2005년 미국의 전체 경상수지 적자의 36%를 차지하면서 태평양지역의 경상수지 불균형의 주요국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중국, 일본, 한국은 2005년 동아시아 지역의 대미국 경상수지 흑자의 72.2%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일본,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전세계 외환보유고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태평양지역의 경상수지 불균형 현황과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태평양지역의 경상수지 불균형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정책과 역내 협력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동아시아 국가의 환율절상은 글로벌 불균형 해결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중국이 위안화 조정에 대한 비유연적 입장을 고수한다면, 다른 동아시아 국가의 환율절상도 불가피해 보이므로 동아시아 국가간의 정책적 협력이 필요하다. 2005년 7월 미달러화에 페그되어 있던 환율제도를 폐지하고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채택하면서 기존보다 유연한 환율제도를 채택한 중국의 선택은 매우 의미 있는 움직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개최된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도 미국은 중국의 환율제도의 유연성을 더욱 부여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러나 일본의 엔화는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평가절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일본이 역내 환율공조정책에 비협조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먼저 유연한 환율정책을 구사하지 않는다면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국은 미국, 일본 및 동아시아 신흥시장과의 삼각무역관계를 구축해왔다. 일본과 동아시아 신흥시장은 중국으로 자본재와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이러한 자본재와 중간재를 수입·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여 미국, EU 등과 같은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수직적 생산체제는 동아시아의 환율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매우 중요한 열쇠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이 미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로부터 좀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일본을 제외한 다른 동아시아 국가는 국내시장수요 확대에 대한 외부 압력을 계속해서 받을 것이다. 일본이 경제회생을 지속한다면,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은 일본, 미국과 협조하여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태평양지역의 경상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국가 전체가 내수주도형 경제성장전략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한국과 ASEAN 4 국가의 화폐가 절상되고 있다. 유로와 엔 대비 달러의 약세가 지속된다면 이러한 현상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예측에 따르면 2006년 일본과 중국의 경상수지흑자는 GDP의 3~4% 이상을 유지할 것이며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아시아와 미국내의 태평양지역의 경상수지 불균형이 일본, 중국과 미국 사이의 불균형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일본과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Promoting the Mobility of Human Resour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HRST) in the Asia-Pacific Region:
Policy Agenda for Cooperation**

과학기술 인적자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유동성 증대 방안

박명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국경을 초월하는 글로벌경제가 정착하면서 국가발전을 위해 창조적인 연구능력과 지속적인 기술혁신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과학기술활동의 중요도는 더욱 제고되고 있으며, 21세기의 각종 이슈는 범세계적 협력과 조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이제까지 비교적 독립적으로 수행해오던 과학기술 혁신활동을 보다 개방적이면서 동시에 보다 경쟁력 있는 체제로 재편함으로써 더 나은 발전을 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세계화로 인해 요구되는 과학기술 혁신활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 가운데 특히 과학기술자를 중심으로 한 인력유동성의 촉진을 통한 글로벌화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과학기술인력의 이동은 동시에 지식의 이동을 동반한다. 유동성 확대는 조직과 국가의 장벽을 뛰어넘은 자유로운 지식교환과 다른 연구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자극을 끌어냄으로써 과학자의 창의성 구현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가간 과학기술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은, 우리나라 기술혁신 주체의 혁신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제고할 것이며, 더 나아가 연구인력의 이동을 통한 과학기술 확산체계의 정착으로 아시아·태평양 및 동아시아 지역의 상호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과학기술활동의 대내외 개방은 그것 자체가 목표라기보다 국내 기술혁신 주체들의 혁신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과학적 공동체 구축방안은 세 가지 목표달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체제 및 제도 등을 우리나라가 먼저 정착시키고, 둘째, 과학기술인력 교류를 통해 아·태지역에 과학기술을 확산시키고, 셋째, 과학기술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에 기반한 아·태지역의 과학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유동성 제고에 호의적인 환경조성을 위하여 고려할 측면으로는, ① 장학금, 연구비 등 충분한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적 측면 ② 일자리의 국제적 공모 방식, 학위 등 자격에 대한 국제적 공인기준이 필요한 고용방법 및 조건 ③ 해외에 일정기간 머물 때 경력 쌓기가 중단된다는 측면에서 귀국 및 경력개발 ④ 비자, 노동허가제 등 이민제한 규정에 대한 출입국 및 구직제도 ⑤ 국가간 사회보장제도의 차이로 인한 해외이주자의 불이익 발생을 보완하는 사회보장 및 세금제도 ⑥ 가족 동반시 생활문제, 배우자 직장 및 자녀 교육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가족 및 교육 측면 ⑦ 이들 제반 측면에서 여성 연구자는 남성보다 모든 측면에서 장애요인이 좀더 심각하게 발생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여성과학자에 대한 특별 배려 등이 논의되었다.

우리나라는 2001년 과학기술 국제화전략 추진 이후 국내외 과학기술인력 교류에 힘쓰고 있지만 국제화 정도가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그간의 실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연구인력 이동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고 국제 혹은 분야 간 이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행 방안으로 네 가지가 제시되었다. 첫째는 연구개발체제의 세계적 기준 정착이다. 연구개발 수행 및 관리 등 연구개발체제 전반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국제화하여 능력있는 해외 연구인력이 매력을 갖고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외국인 과학자에 대한 지원창구 개설이다. 세금,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해외에서 이주해 온 과학기술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출입국, 고용, 사회보장제도 및 세제 등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인력송출국과 상호 또는 다자간 협정체결이 요구된다. 넷째, 주거, 배우자 취업, 자녀 교육, 의료보장 등에서 우호적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사회문화적 장애요인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아·태 및 동아시아 지역의 유동성 확대를 통한 과학공동체의 정립은 학업 달성과 해외경력을 위해 이들 지역을 떠났던 연구인력의 귀환을 촉진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이 와서 연구하고자 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한국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및 동아시아 국가들은 각자의 과학자원을 개발하고 국내외 정책을 확장·보완하는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장려함으로써 세계 다른 지역과도 지식 및 기술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Dealing with Migrant Workers in the APEC Region -

Experiences of Japan, Korea, and Hong Kong

APEC 역내의 이주노동자 정책 - 일본, 한국, 홍콩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우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동아시아 지역의 단기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일본의 장기불황과 아시아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초반부터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1990년대 들어 일본,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주노동자 유입국가로 확대되면서 아시아 역내에서의 노동 이동성이 크게 높아지게 된 것이다. 아시아 지역은 현재 서유럽, 북미 지역과 대별되는 새로운 이주노동자 지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이주노동자 추세는 공통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1)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저숙련 노동자들이며, 2) 단기적인 고용만이 허가되고 있고, 3) 일본, 한국, 대만과 같이 고령화사회가 급진전되고 역내 소득격차가 커지면서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이주노동자 정책은 크게 1) 배제적 모형(exclusionary model) 2) 통합화 모형(assimilationist model) 3) 다문화 모형(multicultural model)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영미식 이민국가들은 다문화 모형을,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같은 일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 통합화 모형을 따르고 있지만, 모든 동아시아 이주노동자 유입국가들은 배제적 모형을 선택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과거 유럽 국가들이 이주노동자 유입 초기에 사용했던 것과 같은, 이주노동자의 직장이 동이나 고용기간에 엄격한 제한을 둠으로써 외국인 단기 이주노동자의 정주화 현상을 막고 지속적인 순환이 되도록 하는 단기 이주노동자 시스템(guest worker system)으로 요약될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첨단산업과 전문가집단을 제외하고 외국의 이주노동자들을 사회의 영구적인 이주자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단기 이주노동자 시스템을 통해 경제발전에 필요한 노동력은 지속적으로 유입하는 반면 문화적 차이로부터 오는 사회적 충돌은 방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방향은 불가피하게 두 가지 사회적·경제적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1)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와 부당한 대우 2) 이주노동자들에 의한 지역 계도화와 소외계

층 형성으로 인한 사회적 충돌이 불가피 하다.

이 논문에서는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일본과 한국, 홍콩의 단기 이주노동자 도입 시스템, 복지 서비스, 불법체류자 방지정책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홍콩의 경우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표준, 복지 서비스, 인권 보호 측면에서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반면 불법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규제는 가장 강해 실질적으로 불법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 한국은 최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리 보장과 인권 보호 등의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혁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크게 부족하며, 또한 일시적으로 부여된 불법체류 노동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가 끝나는 시점에서의 불법체류자 증가 문제가 남아 있다. 일본의 경우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노동공급 부족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자격 부여 없이 산업연수생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세 국가들은 모두 이주노동자의 영구 체류를 막기 위해 엄격한 이주노동자 순환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유입 초기에 엄격한 노동자 순환정책을 실시했던 유럽 국가들이 결국 이주노동자들의 영구 체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선례를 볼 때 이주노동자의 영구 체류를 막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이미 상당한 비율의 불법체류자 문제와 이주노동자들에 의한 지역적 계도화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수요는 일본, 호주, 미국과 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한국 대만과 같은 신흥공업국가들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더욱 높아만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나 협약은 아직까지 뜨거운 논쟁과 사회적 논란 가운데 있다.

결론적으로 논문에서는 국제사회의 대화를 위한 두 가지 의제를 제안하였다. 1) 인권 보호와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 의제 2) 이주노동자의 사회 통합화를 위한 의제가 그것이다. 첫째, 인력유출국가는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인력유입국가는 이주노동자의 정주화 방지에 정책적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정주화 방지에 관해 국제적인 기준과 행동기준(codes of conducts) 마련을 위한 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둘째로 유럽 국가들의 이주노동자 사회 통합화 정책과 같이 아시아의 인력유입국가들도 사회적·문화적 충돌, 인권 침해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이들 이주노동자를 주류사회로 통합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통합화 정책들에 대해 국제사회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